

□ 미 | 디 | 어 | 로 | 본 | 환 | 경 |

간이급수시설 605개 수질기준 초과

전국의 간이급수 시설 605개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의 2만4천474개 간이급수시설을 대상으로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탁도, 잔류염소 등 14개 수질기준 항목의 수치를 측정 한 결과 2.5%인 605개소가 기준을 초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역별 수질기준 초과율은 대전이 25.7%로 가장 높았고 인천(18.3%), 경기(13.2%), 울산(6.6%), 부산(5.4%)도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간이급수시설은 상수관이 보급되기 힘든 농·어촌 지역에 지하수나 계곡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293만명이 이용 중인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 소독처리 등 관리강화를 각 지자체에 요청하고 정수기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

새 아파트는 '포름알데히드 덩어리'

새로 지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2채 중 1채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포름알데히드가 m³당 100~300 μ g 검출됐다. 이는 일본의 권고기준(100 μ g/m³)을 초과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주택 건축시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 배출기준조차 없어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포름알데히드는 방부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데 과다 노출되면 폐 압박, 폐렴 등을 유발한다.

환경부는 전국의 지은 지 1년 이내 아파트 등 90가구를 대상으로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실내농도 수치를 조사한 결과 조사가구의 46.7%인 42가구가 일본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지난 5월 12일 밝혔다.

특히 울산지역의 한 조사대상 가구는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308.5 μ g/m³을 기록, 일본 권고기준의 3배 이상이었다. 또 이 지역 평균농도(174.06 μ g/m³)도 일본 권고기준을 크게 넘어섰다.

아울러 인체의 간, 혈액, 신경계 유해물질로 알려진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톨루엔은 조사대상 87개 가구 중 12곳(13.8%)에서 일본 권고기준(260 μ g/m³)을 넘어섰다. **경향신문**

왜 굳이 4차선인가, 환경단체들 "2차선이면 어때"

계룡산 관통 4차선도로를 추진한 이유에 대해 대전 지방국도관리청 관계자는 "기존 국도 1호선이 대전 시내를 통과하면서 많이 막혀 우회노선으로 외곽의 641번 지방도를 승격시켰으나, 2차선이어서 국도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계룡대에 근무하는 군인들이나 동학사계곡으로 나들이를 가는 논산쪽 주민들이 주로 이용해 별 관심을 끌지 못하던 도로가, 지도속 표시가 녹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뀌자 갑자기 문제도로가 된 것이다.

계룡산과 주변에는 천안~논산고속도로와, 4차선



23번 국도, 691·697·643번 지방도가 남북으로 뚫려 있고, 이를 4차선 32번 국도와 4번 국도가 동서로 이어 주고 있다. 이미 2차선 도로가 있는 계룡산에 4차선 도로를 더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1호선 국도라고 무조건 4차선이 돼야 한다는 생각만 바꾸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교부가 국도 1호선이 2차선으로 남아있는 것을 차마 용납하기 어렵다면 변변찮은 산길에 부여된 분에 넘친 대우를 거둬들이면 된다. 대신 계룡산 국립공원 서쪽을 지나는 691번이나 697번 지방도 구간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2차선이어서 문제가 된다면 논산에서 공주로 바로 이어지는 23번 국도와 구간을 공유하는 것도 방법이다. 실제 전국 국도의 노선 총연장 1만6228km 가운데 1993km가 이런 형태로 노선을 공유하고 있으며, 1호선도 논산에서 대전까지 구간을 4호선과 같이 쓰고 있다.한겨레

프랑스 대기오염으로 수천명 사망 추정

프랑스에서 대기오염으로 매년 수천명이 사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프랑스환경보건청(Afsse)은 차량 배기가스가 주범인 대기오염으로 지난 2002년에 6천500~9천500명이 숨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최근 밝혔다.

Afsse는 벤젠, 오존, 일산화탄소 등 미세 오염물질에 의한 대기 오염으로 이같은 규모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기오염 방지를 통해 수천명의 잠재적 사망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fsse 보고서에 따르면 30세 이상 인구 중 폐암 사망자 670~1천117명이 대기오염에 의해 숨졌을 수

있으며, 이같은 규모는 전체 폐암 사망자의 6~11%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30세 이상 인구 가운데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자 중 3천334~4천876명이 대기오염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산됐다.

Afsse는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 등으로 대기오염도를 떨어뜨리면 2020년까지 대기오염에 의한 폐암 사망자를 335~569명으로, 대기오염에 의한 심장병 사망자를 1천622명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앞서 장-펠릭스 베르나르 국가대기위원회(CNA) 위원장 등 대기오염 전문가들은 정확히 집계할 수 없으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수천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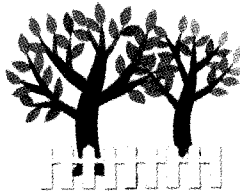
베르나르 위원장은 "대기오염으로 발생한 사망자는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많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프랑스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간 7천여명에 이른다.

Afsse는 "프랑스의 대기오염도는 유럽연합(EU) 기준치에 비하면 훨씬 양호한 편이나 현재까지 나타난 과학적인 연구 결과로는 대기오염으로 수천명의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대기오염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대기내 오존, 일산화질소 등의 양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를 지역주민에게 통보해 차량속도를 통제하고 건강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연합뉴스

IT도 이젠 환경이 '생존 코드'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각국이 잇따라 전자·정보통신기기 제품 환경규제에 나서면서 국내 업계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납땜을 사용하지 않은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을 선보인 엘지전자는 지난 3월 최초로 납을 없앤 모니터를 내놓은 데 이어 곧 이동전화 단말기 제품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엘지전자는 2~3년 전부터 전자제품 땜질용 물질을 납 대신 주석·구리·은 등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물질로 바꾸는 작업을 벌여왔으며, 올해 안에 모든 전자 정보통신 기기 제품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도 지난해 납·카드뮴·수은 등 유해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하드디스크드라이브를 개발해 일부 제품에 사용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삼성전자의 모든 하드디스크드라이브를 납 없는 제품으로 만들 예정이다. 또 반도체 분야에서도 납을 각국 환경기준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공정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에 앞서 최근 미국 인텔은 자사의 비메모리 반도체 제품에 사용되는 납 성분의 95%를 제거한다는 목표를 발표하는 등 세계적인 기업들의 움직임도 부산하다. 인텔은 올해 3분기부터 납을 사용하지 않은 컴퓨터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양산할 계획이며, 내셔널세미컨덕터도 연말까지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엘시디 모니터용 반도체 등 자사 칩 제품의 조립과정에서 납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회로기관 등 납 사용이 많은 컴퓨터 분야는 아직은 환경제품 개발이 미진한 편이어서, 제조업체들은 아직은 제품 회수 쪽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휴렛팩커드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폐컴퓨터 온라인 재활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미국내 소비자들에게 마일리지 점수를 두배 올린 100달러어치씩을 주기로 했다. 델컴퓨터도 폐컴퓨터 수거 비용을 22kg당 15달러 받던 것을 5달러로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컴퓨터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적으로 수거율이 낮아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떠오른 상태다.

2003년에 2600만대의 컴퓨터를 판 델컴퓨터는 지난해 10%에도 못미치는 200만대를 재활용하는 데 그쳤다.

한편 유럽연합은 내년 7월1일부터 모든 폐전자·전기 제품을 생산자가 수거·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2006년 7월부터는 모든 전자·전기 제품에 납·수은·카드뮴 등 6가지의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미국·일본·중국 등도 이와 비슷한 조치를 시행하거나 준비하고 있다.한겨레

수도권 공공기관 경유차 저공해 차량으로 개조

이달부터 환경부와 서울,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공공기관이 소유한 경유차량이 저공해 차량으로 개조된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 자치단체 소유의 청소차, 전경버스 등 경유차량 3천68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개조작업을 벌인다고 지난 5월 7일 밝혔다.

환경부는 총 93억원을 투입해 이 차량들을 LPG(액화석유가스)차량으로 개조하거나 매연여과장치(DPF)와 산화촉매장치(DOC)를 부착할 방침이다.

환경분쟁 조정신청 급증

최근 경기도내 환경분쟁 조정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보상청구액 1억원 이하의 재정사건(금전적 배상요구) 조정권한이 도에 위임된 지난해 1월 이후 지금까지 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사건은 모두 52건에 이른다.

199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여년간 도에 조정신청된 환경분쟁이 26건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세계일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계 잘 못해 낮잠만

인천시가 41억원을 들여 만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이 준공된 지 두 달째 가동을 못한 채 낮잠을 자고 있다.

인천시는 2월 26일 서구 경서동 청라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내에 297평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준공했다.

시는 100t의 음식물쓰레기를 건조해 연간 1만980t의 사료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2년 5월 기술공모를 통해 (주)대우건설과 (주)이오스시스템에게 설계시공을 맡겼다.

그러나 올해 1월 시운전 때부터 음식물쓰레기를 건조시키는 설비에 문제가 발생해 설계기준치의 30%정도 밖에 성능을 내지 못하고 있다.

낙동강수계물관리 지원사업 실효성 없어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상수원관리구역 주민들이 각종 행위제한으로 받는 불이익 보상과 수질개선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사업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물이용부담금으로 1t당 100원씩 부과한 수계기금을 2003년 26억2200만원, 2004년 22억2900만원을 영양군에 지원했다.

그러나 군은 2003년 사업비 전체를 2004년 사업으로 명시 이월시킨데다 사업선정 지침에는 농로개설 등 다른 법령으로 지원이 가능한 주민숙원사업 성격은 가

급적 지양하도록 명시한데도 33건 사업 중 오염물질정화사업 1건, 복지회관 2건, 주민건강관리실 1건을 제외한 28건이 농로 및 안길포장, 도수로설치 등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 방향으로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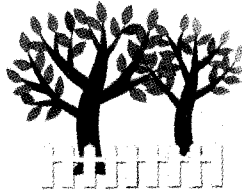
그나마 지원된 예산의 50%정도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시설비로 특별회계에 편성해 환경관리공단 협약체결 사업비용으로 집행돼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환경농업, 수질개선사업에 실질적 지원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관계자는 "영양군은 댐 주변지역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 등 주민 회의를 거쳐 사업이 선정됐다"고 했다. [대구신문]

정수장 중·소 70여곳 개선책조차 없어 지자체 예산 타령만

바이러스 파동의 교훈은 일부 정수장에서 잊혀진 것처럼 보인다. 2001년 경기 하남 등 5개 중·소규모 정수장 또는 거기서 물을 받는 가정 수도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돼 소동을 빚자 환경부는 획기적 대책으로 미국에서 채용하고 있는 정수처리 기준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바이러스를 새로 수질기준에 넣자니 재는데 약 2주일이 걸리고 시료당 분석비가 150만원이 나 들어, 대신 바이러스가 원수 중에 들어 있더라도 정수공정에서 죽거나 제거되도록 정수공정을 엄격하게 관리하자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번 현황조사 결과는 일부 정수장, 특히 중·소규모 정수장은 이런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 대책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수처리 기준은 바이러스 제거율 99.99%, 지아디아 제거율 99.9%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철저한 여과와 소독 공정이 필요하다.



□ | 미 | 디 | 어 | 로 | 본 | 환 | 경 |

그러나 이번 환경부와 서울대 조사에서 전국 정수장 550곳 가운데 146곳이 수인성 질환을 일으키는 원생동물인 지아디아를 없앨 만한 소독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 불만족 정수장 가운데 82%인 119곳이 수돗물 생산능력 하루 1만t 이하이고 절반 가까운 69곳이 5천t 이하의 중·소규모 정수장이었다. 이 가운데 정수기준이 시행되는 오는 7월 이전에 시설을 개선할 계획을 세워놓은 곳은 68곳에 지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대도시에 있는 정수장들 대부분은 기한 이전에 어쨌든 소독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를 들어 지아디아 소독의 70%밖에 갖추지 못한 서울 뚝도정수장 등 14개 정수장은 정수장 이외에 송수관로와 배수지에서 추가로 소독하는 것을 인정해 달라고 상수도협회에 인증을 신청해 놓고 있다. 제주도는 심층암반수를 원수로 써 여과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소독능력이 낮게 나온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기준 위반이 뻔한데도 개선계획도 없이 손을 놓고 있는 70여 중·소규모 정수장이다. 고려대 환경공학과 최승일 교수는 “시청 건물은 번듯하게 지으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데는 예산 타령을 하는 지자체장들의 인식전환이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한겨레**

1회용품 노리는 '일파라치' 활개

쓰파라치, 자파라치 등 각종 포상금을 노리는 신고꾼들로 인해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찬반 양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1회용품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속칭 '일파라치'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일파라치'의 경우 한 가게가 계속해서 2~3차례 적발되거나 한 동네에서 수십 건이 신고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는데다 포상금제 적용에 대한 혼선, 30만~300만원의 과태료 등으로 영세상인들의 불만이 높게 일고 있다. **무등일보** ◀

6월 환경기술인 실무교육

용·폐수 재이용기술과 설치운영 관리실무 2004년 6월 23일 ~ 6월 25일

자세한 내용은 본지 4페이지 참조